



해방후 우리 경제 半世紀의 회고와 展望

金光錫(상임자문위원)

해방 이후 어느덧 半世紀가 지나고 새로운 반세기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해방 직후 약 10년간은 南北分斷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그 뒤를 이은 전쟁 등으로 경제가 극심한 不安定과 沈滯를 면치 못함으로써 경제개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1953년 休戰이후 미국 및 UN의 방대한 경제원조에 의존해서 전쟁복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 와서야 비로소 경제개발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겠다. 이 전후 복구기에는 방대한 외국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그다지 높지 못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이 때부터 거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휴전 이후 42년간 연평균 7.7%씩 성장함으로써 근 23배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인구도 2.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實質國民所得은 연평균 5.7%씩 성장하여 약 10.1배 정도 증가될 수 있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불변 美달러 기준으로 1953년의 약 760달러에서 1995년에는 약 8,000달러로 증가했던 것이다.

휴전 이후의 이러한 경제성장은 시종일관 工業化政策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함께 輸入代替를 중시하는 공업화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그 후는 輸出主導型 공업화전략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그 결과, 1960

년대 중반이후로는 수출의 증가가 가속화되어 그것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工業成長 및 경제발전의 原動力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공업화가 주도한 경제성장은 경제구조면에서도 장기적으로 기적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 내지 향상을 수반해 왔다.

따라서 1960년대 초반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그 전보다 크게 가속화되어 연평균 9%정도로 높아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종래의 對內指向的 工業化戰略에서 對外指向的인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있었다고 보겠다. 이러한 방향전환과 함께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政府主導方式의 경제운용을 지속해 오고 또한 先成長·後分配 원칙의 성장전략을 채택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수출주도전략과 결부된 복합적인 高度成長戰略으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은 실현했지만, 그러한 성장은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수반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발전은 상당한 기간동안 市民權에 제약을 가한 權威主義的 통치하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발전은 전형적인 「先經濟發展·後民主化」의 상례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위와 같은 복합적인 고도성장전략에 따라 196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그만큼 成長潛在力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합적인 고도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顯在化하는 데 유효했을 뿐이다. 1960년대 초반 이후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핵심은 바로 人的資源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많은 실업자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生産活動可能人口層은 계속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輿件下에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資本과 技術이었으나 우리나라는 상당기간 세계적인 先進技術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필요한 기술은 資本財 도입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쉽게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은 상당기간 우리나라 공업화를 제약하는 요인은 되지 못하고 자본만이 성장제약 요인이었다. 자본투입만 급속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국내의 풍부한 人的資源과 결합시킴으로써 고도성장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본은 저축동원이나 外資導入에 의해서 비교적 손쉽게 조달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한 요인은 潛在力 부족이 아니라 需要 측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과 복합된 고도성장전략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실질수요 확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현재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잉여경제가 아닌 勞動不足經濟로 전환되면서 풍부한 人的資源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점차 한계에 부딪치기 시작했으나, 자본투입증가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최근까지 고도성장기조

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면 장래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앞으로 人的資源의 부족으로 그 성장잠재력이 技術進步率에 따라 좌우되는 先進國型 低成長時代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간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이 풍부한 賦存要素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반세기동안은 그러한 용이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성장요인의 절반 이상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에 의해서 설명되었으며, 總要素生産性 증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전체성장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반에도 미달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중 상당부분은 기술진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원배분 개선효과와 規模經濟利益 효과를 반영했다. 그 중 기술진보율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의 약 1% 포인트를 설명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노동력 증가율을 보면 1995~2000년간에는 연평균 1.1%내외, 그리고 그후 2010년까지는 연평균 0.5%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資本投入 면에서도 1990년대 전반기의 우리나라 고정투자율(對GNP)이 이미 35%내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투입 증가율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요인이었던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가 앞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잠재력 유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게 되며, 이것은 研究開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과거와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990년대 후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연평균 5%내외가 되고 21세기의 첫 10년간에는 연평균 4%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앞으로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과거보다 높일 수 있다면 장래의 성장잠재력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世界化 추세에 따라 국경없는 기업간 경쟁이 촉진되면 技術革新을 위한 자극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술진보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장기간 2%포인트 이상 유지된 경험은 흔하지 않았다. 1970년대초까지 연평균 9%정도의 고도성장을 장기간 지속하던 日本經濟도 성장잠재력의 감소로 인해서 1974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을 4%이상으로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연유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이나 선진국이 되는 길목에는 고성장기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低成長期도 반드시 거쳐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는 일반 국민과 기업은 성장잠재력 감소에 의한 低成長時代의 돌입을 정부정책의 과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난 半世紀와는 다르게 상대적인 低成長期가 다가오고 그 기간에 우리나라가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與否가 결정됨을 인식하고 사전적인 정책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경희대학교 학사(1957)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부원장(1972~82)
미국 Williams 대학교 경제학 석사(1968)	경희대학교 경제학 교수(1982~94)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1979)	한국 국제경제학회 회장(1984)
주한 미 경제협조처 경제고문(1958~71)	세계경제연구원 상임자문위원(1995~현재)
미국 Princeton대학교 연구교수(1971~72)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후원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근거 :
 - 법인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 개인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4호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